

전문가 코칭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성경룡 교수

신뢰위기의 시대,  
기업의 역할과 책임

윤리 연구소

스웨덴의 반부패시스템  
성공 원인

—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 기업윤리 브리프스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7  
**07**



국민권익위원회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crc.go.kr](http://www.acrc.go.kr)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행일 2017년 7월 1일 (매월발행, 통권55호, 비매품) 발행인 박은정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 신청 044-200-7167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성경류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신뢰위기의 시대, 기업의 역할과 책임

## Q 신뢰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7년 사이 한국 순위는 세계 29위에서 11위로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이후 3년째 역대 최저인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10월~11월 세계최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업 에델만이 실시한 신뢰도 지표 조사에서도 정부(28%)와 기업(29%)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단 17%에 불과했다. 공적제도나 기업체제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면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며 개혁세력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다.

신뢰위기의 시대에는 사람과 조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의 공동이익을 우선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포용은 생각과 입장, 이해관계와 처지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서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불신의 벽을 허물면 4%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이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야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노사가 모두 포용적 리더십을 갖고 대화와 타협에 임해 갈등지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경쟁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Q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기업의 신뢰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피해야 할 대표적인 부정행위로는 △계약 성사를 위해 정부에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청탁, △기업임원과 평직원 간 엄청난 임금격차, △세금회피성 수익이전, △일자리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품질저하를 통한 비용절감 등이 있다. 기업불신은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업이 저지르는 데서 비롯한다. 이는 기업이 이윤창출과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사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있을 때, 기업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슈페터는 오래 전 자본주의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는 자본가가 아니라 기업가이며, 기업가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엔진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므로 기업은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로 거듭나야한다는 것이다. 애쓰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착취적 사회경제제도를 가진 국가는 굳이 혁신을 하지 않아도 지배세력이 부를 추구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을 쥐어짜기보다는 혁신생태계를 주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야한다.

기업은 투명경영·윤리경영의 평가·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서 부정부패로 망가진 국민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한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알 수 있듯이 기업도 클린 인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투명하게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사건도 민간기업의 파트너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클린 인사 및 기업문화는 부정부패의 싹을 미연에 자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자리문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기업도 책임감 있게 사회의 공유가치창출에 기여해야한다.

기업이 중심이 된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사회전반에 청렴의식을 뿌리내리고 청렴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살고 지속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조직경영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정경유착이 법제도로 불가능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착취관계가 아닌 공정경쟁과 협력관계가 조성될 때 국민들의 기업신뢰도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 윤리적 기업은 항상 윤리적일까?

윤리경영 교육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기업 사례들이 있다. 그 기업들은 항상 윤리적/비윤리적인 것일까? 윤리적/비윤리적 기업의 대명사처럼 제시되는 기업들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 윤리적 기업의 잘못된 선택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CS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하는 긍정적 사례이다. 하지만 이들도 항상 윤리적인 대처를 한 것은 아니었다.

#### ▶ 1982년, 타이레놀 사건

1982년 9월, 시카고에서 청산가리가 주입된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존슨앤존슨은 사망원인과 타이레놀의 관계를 부정하는 대신 미국 전역의 타이레놀을 리콜한다. 수사결과, 범인이 슈퍼마켓과 약국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면했지만, 존슨앤존슨은 재발방지를 위해 타이레놀의 포장을 바꾸어 재출시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들의 모습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타이레놀은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을 거의 회복할 수 있었다.

#### ▶ 타이레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1989년, 타이레놀 과다 복용이 간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나자 존슨앤존슨은 피해자들로부터 설명 불충분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소비자가 적당량을 복용한다면 타이레놀은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을 뿐, 책임은 외면했다. 또, 2009년과 2010년에는 제품 오염 문제로 수차례 리콜이 진행되었다. 존슨앤존슨은 오염된 제품에 대한 문제를 알았음에도 FDA 조사 이후에야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업

'네슬레'는 분유사업을 시작으로 제품군을 늘리며 성장했지만 분유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다.

#### ▶ 네슬레와 시민단체

1970년대, 네슬레는 개발도상국에서 분유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제대로 분유 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 영어를 모르는 엄마들은 소독되지 않은 병에 오염된 물로 분유를 타 먹었다. 심지어 비싼 분유값을 아끼기 위해 분유를 아주 묽게 타기도 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아기가 설사, 이질, 전염병, 영양실조로 죽어갔다. 시민단체들은 분노했지만 네슬레는 이를 사소하게 여겼고, 그 결과는 네슬레 전 제품에 대한 10년에 가까운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네슬레는 1981년이 되어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WHO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감독하는 '네슬레 이유식감사위원회'를 만들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로 1984년, 대부분의 단체는 불매운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2010년, 네슬레가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인도네시아 팜오일 공급업자들과 비윤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비판하며 네슬레의 키켓 광고를 패러디해 일상에 지친 남자가 키켓 봉지를 뜯어 오랑우탄의 손가락을 먹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네슬레는 이 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만 대응하여 다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시간이 흘러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네슬레는 그제야 팜유 공급자를 교체하였다.

### 비윤리 기업의 재도약

1847년 설립된 지멘스는 독일의 국민기업이었지만 부패스캔들을 일으키며 신뢰를 잃었다.

#### ▶ 지멘스의 부패스캔들

2006년 11월, 독일 지멘스에서 4억 6000만 유로에 달하는 비자금에 뇌물로 제공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멘스에 부과된 벌금과 합의금은 3조 원에 달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그들에게 준법을 위한 조직과 정책, 절차가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와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 ▶ 대대적인 개혁



지멘스는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기존 경영진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하였다. CEO까지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 각국 지사의 감사조직은 독일 본사 중앙부서로 집중되었고, 재무장관 출신의 외부 감사인이 임명되었다. 준법감시인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준법 교육은 관리자의 책임으로 넘어갔다. 관리자에게 교육을 받자 직원들도 준법교육에 대한 무게감을 달리 느꼈다. 지금도 지멘스는 자신들의 부패 스캔들을 숨기는 대신 대내외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그 때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적 기업도, 비윤리적 기업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고객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기업이 윤리적 기준을 명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위배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면, 선택의 순간 망설임 없이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스웨덴의 반부패시스템 성공 원인



스웨덴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 기준 세계 10위(약 5만 5천 달러)이고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잘 살면서 동시에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과감한 개혁조치, 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 역사적 맥락에서 정부의 개혁의지

18세기 말 이전의 스웨덴은 전형적인 부패국인 동시에 후진국이었다. 특히 1789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당시 스웨덴 영토였던 핀란드를 잃게 되자,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고 동시에 공직자의 불법행위도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감에 대한 개혁조치 중 하나가 대법원 설치였다. 또한 19세기 중반에 입헌군주제의 도입과 함께 관료제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이른바 빅뱅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투명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의 개혁조치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적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를 튼튼히 하는 관료제를 성립시키고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 제도 및 행위자의 시각에서 개혁의 실천

스웨덴 반부패시스템의 특징은 공공영역의 정보 공개와 각종 클린사회를 위한 제도적인 운영이다. 스웨덴은 이미 1766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법인 「출판언론자유법(Freedom of Press Act)」을 성문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를 「공공공개법」으로 발전시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 세계 70여 개 나라로 확산시켰다.

한편 1809년 만들어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은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의 반부패 행위를 감시·감독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경고, 시정 외에도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고양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와 정부기관에 공무원 윤리기준정책(Policy-dokument)을 수립하였다. 2006년 스웨덴 재무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체(SALAR) 공동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하고자 뇌물과 이해충돌 관리지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다.

반부패를 실천하려는 스웨덴의 의지는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모나 살린 전 부총리가 조카에게 줄 생필품(기저귀와 초콜릿 등) 2000크로나(약 34만 원) 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한 사건이었다.

스웨덴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2002년 스웨덴 수상에 의해 발족한 「글로벌 책임을 위한 파트너십(Swedisch Partnership for Global Responsibility, SPGR)」으로, 스웨덴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권, 반부패, 친환경 옹호에 가치를 둔 자발적 활동문화이다.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SPGR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부와 기업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사관 등 해외 공공기관에서도 기업소개의 일환으로 SPG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기업의 수출신용장(export credits)을 CSR 촉진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스웨덴수출신용장보증이사회(Swedish Export Credits Guarantee Board)」는 모든 고객들에게 SPGR과 반부패 규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 ▶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나라 윤리경영에 주는 시사점

투명한 반부패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스웨덴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깨끗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첫째로 경제적 환경과 클린사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잘 사는 것과 투명한 나라가 되는 것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은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개인이 잘

살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유인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현재의 3만 불의 벽을 넘는 경제 구조를 갖는 것은 좀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

둘째, 국가의 개혁정책과 시민들의 실천의지이다. 스웨덴은 국가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부패척결을 위해 옴부즈맨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개혁했다. 특히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 주고

부패에 관한한 누구에게도 관용을 허락하지 않는 실천정신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며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높은 시민의식은 이러한 질 높은 투명사회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정부의 개혁정치뿐 아니라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스웨덴보다도 높은 투명한 사회와 기업을 꿈꾸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시대적 소명으로 보인다.



##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 G20 HANGZHOU SU

2016年9月4-5日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므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 후 매 2년마다 행동계획을 수립해오다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2017~2018>(이하 '행동계획')이 승인됐다. G20 회원국이 UN반부패협약을 비준(批准)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투명성·포용성 제고를 위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제도에 대한 무허점, 행동에 대한 무장벽을 이행하는 반부패행동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이 행동계획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16번째 목표에 따라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도난당한 자산의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 ▶ 실천적인 협력

국제 협력은 성공적인 부패 방지/수사/처벌 그리고 도난당한 자산의 반환에 필수적이다. '행동계획'은 부패방지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국내

외 법 집행 기관과 관련기구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부패에 연루된 자들의 도피처를 계속해서 없애나갈 것이며, 도난당한 자산이 UN반부패협약에 따라 반환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범죄수익 관련 업무를 계속 지원하며 반부패실무그룹(ACWG)과 FATF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 ▶ (실질적인) 수익소유권의 투명성

수익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은 부패와 불법금융을 예방하고 노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행동계획은 수익소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G20의 엄격한 원칙 아래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소유권을 확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의 실제 소유자와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확인하고 공유하면 부패한 사람들이 거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투명성에 관한 국제표준 준수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수익소유권의 정보 활용이 부패 및 관련 자금세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공공 부문의 청렴과 투명성

정부 지출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패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막고 진실을 밝히는 열쇠이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G20은 공공 계약, 예산집행 과정 및 관행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정보공개원칙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반부패기관의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십, 공개데이터 사용을 약속하고 있다.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기관의 청렴과 책임 문화를 높일 수 있다. 우선 과제는 부패방지가 가능하게 조직화하고 반부패 프로그램 실천에 공공 기관이 앞장서며, 국제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가야 한다. 또한 부패행위의 억제와 적발을 위해서는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부고발자를 위한 입법 및 제도적 보호 장치의 실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민간 부문의 청렴과 투명성**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 G20은 청렴문화증진과 중소기업 및 비금융 전문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민간주도의 반부패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을 모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 반부패기관, 규제당국, 법집행기구, 금융정보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

▶ **국제 반부패기구와의 공조**

G20은 국제기구가 부패방지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기구 간 서로 공조하여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해나갈 것이다. 대표적으로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해나간다.

▶ **부패방지 역량강화와 반부패 실천과제들**

G20 정상은 글로벌 차원에서 UN반부패협약 조항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부패방지 국가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테크니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G20 국가의 반부패 실천 과제로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신기술 모색, △반부패 우수 사례 공유, △국가 간 서로 학습하기, △국제기구와 협력, △적절한 테크니컬 지원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반부패실무그룹(ACWG)의 업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파트너 조직과의 협력 및 대화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국제조직 '열린정부파트너십'(OGP)/'세계관세기구'(WCO)/'과세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과 같은 새로운 대화 파트너와의 협력 및 대화이다. 이처럼 실무 차원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이 글로벌 부패방지의 핵심인 것이다.

**윤리경영  
Step by Step**

**확산기 2단계 - 윤리경영 실천 홍보**

회사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의지나 회사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데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내홍보는 교육효과의 증진과 기업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의지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죠. 우선 기업의 상황과 윤리경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아래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해보고, 이 외에도 우리 회사만의 창의적인 홍보 아이디어를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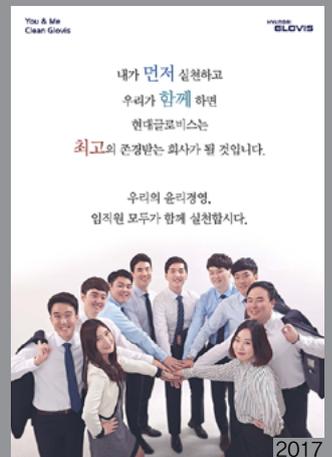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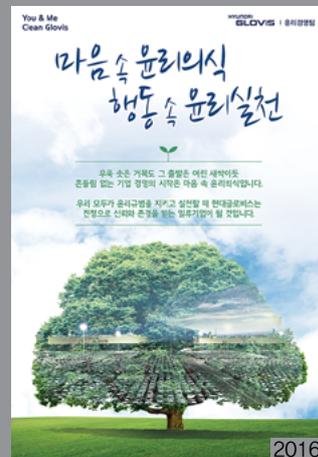
- ▶ **홈페이지 코너 개설** 회사의 홈페이지에 '윤리경영'란을 개설하여, 회사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
- ▶ **CEO메시지** 경영진의 강력한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제작
- ▶ **가이드북/사례집** 딜레마 사례에 대한 Q&A 사례집 형태
- ▶ **포스터** 메시지를 간결한 문구와 이미지로 표현
- ▶ **e포스터** 30초 이내의 포토 애니메이션 형태로 일상 속의 윤리 캠페인을 전개
- ▶ **윤리레터/소식지** 정기적으로 청렴·윤리경영 활동 독려
- ▶ **리플릿/브로슈어** 특정 이슈에 대한 홍보
- ▶ **홍보 아이템(기념품)** 윤리경영 기념품 배포
- ▶ **화면보호기** 청렴·윤리가치/행동지침 등을 전달
- ▶ **공모전 개최** 반부패 청렴과 같은 한 가지 주제로 표어나 이미지 공모

타사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리플릿은 청렴문화 형성 단계, 공익신고 절차 등의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네요.



현대글로벌비스는 매년 6월 2일을 '윤리데이'로 지정하여 윤리경영 홍보 활동의 하나로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윤리경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Step에서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시스템 구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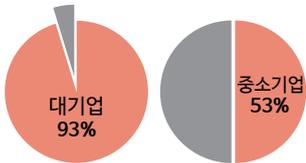
## 국내동향

### 1 국민권익위,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 경험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CA 포럼)에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ACA 포럼은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 반부패기구 장관급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ACA 포럼 사무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청렴도 제고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의제 선정을 주도하여 아태지역 내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http://blog.daum.net/loveacrc/10364>

### 2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과의 상생(相生)을 강조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자녀 입학 돌봄 휴가',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 등 과거와는 달리 육아휴직도 복지 제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률은 대기업보다 40%나 낮았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대책 발표와 별개로 휴직조차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3594.html#csidxb86ec898b252318aee53710716d747e](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3594.html#csidxb86ec898b252318aee53710716d747e)

### 3 정부,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 협약 서명, '구글세' 본격화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 달러(약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관련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G20과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 공조체계로서,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효력이 신속하게 발휘되도록 마련한 협약이다.

참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08000242>

## 국내행사

#### 내부감사입문 교육과정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일시: 2017년 7월 17~19일  
장소: 서울, 생산성본부

#### 신유통트렌드와 미래 성장전략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미래)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일시: 2017년 7월 12일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해외동향

### 1 中 '인터넷 안전법'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중국 당국은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 대응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안전법'을 전격 시행하였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기업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인터넷 안전법'의 시행으로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사의 자료를 중국 바깥으로 옮길 수 없게 되었다.

참고: <http://news.donga.com/3/all/20170530/84644151/1#csidx7a257f16a058ba395f3d477d24aa338>

### 2 세계 2위 자동차 에어백업체 다카타 '파산 절차'

세계 2위 자동차 에어백업체인 다카타는 제품 작동 시 과도한 폭발로 내부 금속 부품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2014년 세계적인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다. 미국연론은 5월 18일, 집단소송의 원고들이 도요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4개사와 5억 5300만 달러(약 6260억 원)의 배상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다카타는 합의에 따라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리콜비용 8억 50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다카타는 현재 일본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참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3021&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3021&link=ORI&cooper=NAVER)

### 3 호주 세븐일레븐 임금착취액, 호주 사상 최대 규모



호주 세븐일레븐 가맹점들이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만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 임금 착취가 드러나 본사가 자발적 보상에 나섰다. 호주 기업 역사상 최대 체불 임금 지급 사례로, 총 2832명에게 1억 1070만 호주달러(약 945억 원)를 보상했다. 자발적 보상규모는 1억 호주달러 이상이지만, 기존 법에 따른 벌금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호주 정부는 가맹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벌금액을 늘리는 등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6/13/061900000OAKR20170613056500093.HTML>

## 해외행사

#### 2017 Governance, Risk, and Control Conference 2017 거버넌스, 리스크 및 통제 관련 컨퍼런스

주최: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일시: 2017년 8월 16~18일  
장소: Gaylord Texan, Dallas-Ft. Worth, TX

#### Corruption Prevention for Planning Professionals 기획전문가를 위한 부패예방 교육

주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일시: 2017년 7월 28일  
장소: Sydney, Australia

# 청탁금지법 check!

## 사례소개 ▶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지시

지난 2016년 하반기, 경기도의 A소방서는 준공필증 신청을 한 지역내 소방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공사법 지도 및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소방시설공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당시 A소방서의 소방서장이 부하직원을 불렀다. “봐줄 수 있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지?” 해당 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해당업체 담당자와 소방서장이 서장실에서 면담을 한 직후의 일이었다.

▶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경기도는 해당 소방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소방서장은 '위법사항 목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던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변화하는 대한민국 ▶ 청탁금지법으로 만드는 인식의 변화

한 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이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청탁금지법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선 응답자의 95.5%가 청탁금지법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재 시행중인 사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중 45%는 업무상 선물을 할 때 예전보다 신경이 쓰인다고 답했으며, 업무적 차원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도 43.8%가 예전보다 신경 쓰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실제로 42%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선물이나 접대문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이를 위해선 개인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터치페이 문화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고 79.8%가 응답)

##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윤리경영,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생각하나요?

### A 교육업체 L 대리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 공공기관도, 기업도 변화하고 있지만, 인식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대 의견이나 불만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심각해지니까요.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한 기업 문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D 무역업체 S 사원

저는 꽤나 발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하여 느낀 회사는 부당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맞추보세요

다음 중 반부패와 관련된 법이 아닌 것은?

- ① FCPA
- ② Bribery Act
- ③ ISO37001
- ④ 청탁금지법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ypark@korea.kr](mailto:aypark@korea.kr)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2번 지난 호 정답자는 이연호님, 김정운님, 이혜민님, 김민준님, 이희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